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2. 1. 5.(수)	담당부서	재생에너지정책과
담당과장	이재식 과장(044-203-5360)	담 당 자	임기홍 사무관(044-203-5363)

'21년 재생에너지 4.8GW 보급, 목표(4.6GW) 초과 달성

- '21년 태양광 4.4GW, 풍력 0.1GW 등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**'21년 재생에너지 보급(사업용 + 자가용)을 조사**한 결과, **4.8GW**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음.

○ 이는 **'21년 보급목표(4.6GW)**를 **초과 달성**한 것으로 '재생에너지 3020 계획' 수립('17.12월) 이후 **4년 연속 초과 달성**하였음.

○ 발전원별 연간 보급량은 **태양광 4.4GW, 풍력 0.1GW, 기타(바이오 등) 0.3GW**로 집계되었음.

< 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(단위 : GW) >

	'18	'19	'20	'21(잠정)
합계	3.6	4.5	5.3	**4.8**
태양광	2.6	3.9	4.7	4.4
풍력	0.2	0.2	0.2	0.1
기타(바이오 등)	0.9	0.4	0.5	0.3

* 실적 : ('18~'20) '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, ('21) 에너지공단 설비등록 잠정실적

□ **누적 재생에너지 설비**는 '21년말 기준 **약 29GW(太 21GW, 風 1.7GW)** 수준

○ '재생에너지 3020 계획' 이후 **최근 4년('18~'21)간 신규 보급용량**은 **18.2GW**에 달하며, 이는 '17년말 12.2GW와 비교시 **1.5배 증가한 수준**

- 특히, **태양광**의 경우 **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.6GW**로 '17년말 누적 용량 6.4GW대비 **2.4배 이상을 신규 확충**

○ 이에 따라,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(사업용 기준) 역시 **'17년말 3.2%**에서 **6.5% 수준('21.10월 기준)**으로 **2배 이상 증가함.**

□ 다만, **'21년 연간 보급속도는 '20년 보다 소폭 감소**한 것으로 분석됨.

○ **(태양광)** 안전성 확보를 위한 **입지규제 강화** 등에 따라 **산지 태양광**의 보급이 **'20년 보다 감소**하였음.('20년 1.2GW → '21년 0.8GW, **0.4GW 감소**)

* 산지 태양광 안전 강화('18~'21) : REC가중치 축소(1.2→0.5),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(25도→15도) 등

- 이외에도 **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** 등에 기인

○ **(풍력)** 사업 추진시 부처별 **복잡한 인·허가절차**(10개 부처, 29개 법령), **주민 수용성 문제** 등으로 **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**되고 있음.

* 풍력 인허가 기간 : 국내 약 5~6년, 해외 약 3~4년

- 다만, **지난해 REC가중치 상향**(1.0→1.2) 등에 따라 **'20년 보다 착공이 크게 증가**하면서 **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**될 것으로 기대

* 풍력 연간 착공 실적 : ('20) 4개소, 120MW → ('21) 13개소, 902MW

□ 산업부는 향후 NDC,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**재생에너지 보급**을 위해 **다양한 정책적 노력**을 적극 강구할 계획임

❶ **'22년 RPS 의무비율 확대**(10% → 12.5%), **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,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*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** 등 사업자의 **적정 경제성 확보 지원**

* 내부망 연계거리 : 해상풍력 발전단지內 개별 발전기를 모두 연결하는 최단 거리

❷ **「풍력발전 특별법」 제정,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,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·제공** 등 재생에너지 관련 **규제·절차 개선**

*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('원스톱샵') 설치 등 위한 「풍력발전 특별법」 발의('21.5월)

❸ **발전소 인접주민 인센티브 및 주민참여 확대*, 주민참여 발전사업 우수사례 발굴·확산** 등을 통한 **주민수용성 제고**

* [1]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두텁게, [2]주민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, [3]이격거리 개선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, [4]농협·수협 등의 재생에너지 참여 독려 등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임기홍 사무관(☎044-203-53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